기획논문 「정부학연구」제28권 제1호(2022): 87~121
DOI https://dx.doi.org/10.19067/jgs.2022.28.1.87

원고투고일: 2022.03.24.
게재확정일: 2022.04.13.

유권자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평가: 여야 협력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길정아**

본 연구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여야 간의 초당파적이고 협력적인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분석 결과, 여야 간의 타협과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과 관련된 여러 차원의 평가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정책적 기조는 본질적으로 당파적 속성을 띠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에는 정당 선호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여야 간의 상호작용의 양상은 다수결제도 하에서 다수당 지지자들보다는 소수당 지지자들에게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다. 따라서 여야 간의 초당파적 협력에 대한 인식은 특히 소수 야당 지지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냄으로써,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 평가에 대한 당파적 차이를 상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히 전 국민적인 지지를 필요로 하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협력과 소통에 기반한 의사결정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여야 협력, 정책 평가, 코로나 바이러스

Ⅰ. 서론

대의민주주의는 사회 내 존재하는 이익을 집약한 정당들이 의회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이다. 유권자들은 대의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3A2075609).
**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유권자의 정치태도, 투표행태, 민주주의 등이다(gilj@korea.ac.kr).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의 주요 기구인 의회가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를 지키고(Tyler 1994), 타협이라는 대의민주주의의 규범적 가치를 구현할 것을 기대한다(Durr et al. 1997; Ramirez 2009). 특히, 대통령제 하에서 실질적으로 행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대립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정치적 환경을 고려할 때, 여야 간의 협력은 의회 내의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시행에 대한 평가와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여야 간의 협력적 상호작용은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초당파적인 지지와 순응을 구축하고, 따라서 정책의 추진을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나타나는 의회는 정당 간의 대립과 갈등의 장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의회가 구현해야 할 규범적 가치와 현실 정치에서 나타나는 괴리를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 간의 갈등은 의회를 포함한 정치 전반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를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듯, 정치권의 갈등에 대해 유권자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경험적 근거들이 제시되어 왔다. 의회의 양극화 수준은 의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낮추며(McCarty et al. 2006; Theriault 2008; Jones 2015), 의회 내 정당 간의 갈등과 대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의회에 대한 신뢰와 평가를 하락시킨다는 것을 검증한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었다(Cooper 1999; Durr et al. 1997; Hibbing and Theiss-Morse 1995; Hibbing and Theiss-Morse 2002; Kimball and Patterson 1997; Ramirez 2009). 이에 대해 역으로 말하면, 상술한 경험적 근거들은 정치권의 초당파적(bipartisan)인 의사결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를 방증한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코로나19의 팬데믹 환경 하에서, 정부는 코로나 방역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방역 정책은 시급성을 띠며, 더욱이 방역은 전국민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집합행동(collective action)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김정 2021). 따라서 방역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시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책의 원활한 시행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를 고려할 때, 정부의 정책은 집권 여당과의 논의 하에 입안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의 논의와 타협을 바탕으로 한 협치를 통해 입안되고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Tyler 1994)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초당파적 합의에 근거한 정책의 시행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선거에서 승리하여 국정 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정부는 특정 정당이 이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기조는 당파적이고 이념적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와 이러한 정치적 속성을 달리하는 유권자들은 정부의 정책

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에는 기본적으로 당파적 차이가 발현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책의 시행은 정부의 지지자로 이루어진 일부 시민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시행은 정부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까지도 이끌고 가야 한다는 과제를 수반한다. 하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야 간의 협력이 구축되어 있다면, 특히 야당 지지자들에게서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본 연구는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순응을 높이고, 원활한 민주주의의 운영을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여야 간의 갈등적/협력적 상호작용의 양상은 대의민주주의의 질적 제고와 사회 통합, 그리고 성공적인 방역 정책의 시행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 요인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여야 간의 협력과 소통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 평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 나아가 이러한 영향력이 특히 야당 지지자들에게 명확하게 발현됨으로써 정책 평가에서 나타나는 당파적 차이를 완화시키는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의 결과가 유의미하다면, 특히 대규모의 지지와 순응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방역 정책과 같은 집합행동의 영역에서, 여야 간의 초당파적 상호작용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광범위한 지지와 순응을 높임으로써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대통령제 하에서 부처 간, 여야 간 상호작용: 정부+여당 대 야당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은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 국정 운영의 권한을 가질 정당을 선택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당은 정부를 구성하고 주어진 임기 동안 정책을 시행할 정치적 정당성(political legitimacy)을 부여 받는다. 그런데 특히 삼권분립(separation of powers) 및 부처 간의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을 근본으로 하는 대통령제 하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실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행정부-의회 간 관계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대통령제 하에서 이러한 행정부-의회 간 관계는 기본적으로 각각을 단일한 조직체

로 상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적 맥락에 따라 이러한 관계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King 1976; Andweg and Mijzink 1995). 먼저, 정부는 하나의 독립적인 제도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와 집권당이 실질적으로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정당 정부(party government; Schattschneider 1958)로서 기능한다. 또한, 입법부로서의 의회는 여당과 야당을 포괄하고 있는데, 따라서 여당은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의 일원인 동시에 정부를 지원해야 하는 집권당의 지위를 이중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당 기율(party discipline)이 강한 한국과 같은 정치적 환경에서는 마치 내각제와 같이 행정부+집권당 대 야당의 대립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것이다(박찬표 2001; 정진민 2008).

이러한 행정부+집권당 대 야당이라는 정치적 대립 양상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시행에서의 의회의 동의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대통령제 하에서, 정부는 집권당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 및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정치적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집권당의 적절한 협력이 필요하다(강원택 2019). 둘째, 본 연구가 보다 주목하는 것으로,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동의는 한편으로 야당으로부터 기인해야 한다. 다수결주의 제도 하에서 정부 및 집권당이 정치적 권력을 부여받았을지라도, 이에 더하여 집권당이 원내 다수 의석을 차지했을지라도,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승자독식이 아니라 소수당의 의사 또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레이파트(Lijphart 1999)는 다수제(majoritarian democracy)보다 합의제(consociational democracy)를 보다 긍정적으로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반론 또한 제기되고 있어 합의제의 우월성을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지라도(Shaw 2004), 곽진영 외(2009)는 소수당 혹은 야당 또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대표성을 가지는 정당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들로 하여금 충분한 의사 표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이렇듯, 행정부+집권당 대 야당의 대립이라는 정치적 환경 하에서, 여당과 야당 간의 상호작용은 의회가 법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산출하고 시행하는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즉, 정부는 집권당과의 긴밀한 협조와 동시에 야당의 동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정부와 한 편인 여당, 그리고 정부와 대립을 형성하는 야당 사이의 타협적인 상호작용이 구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렇듯, 여야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에서는 정부와의 관계 또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입법 기관인 의회는 정당들이 시민들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여 이를 제도적 영역으로 이끌고, 이들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논의함으로써 법안을 제정하고 정책을 입안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의회는 정당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장(arena)이며, 그 안에서 여러 이해관계와 갈등들이 조정되고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여야 간의 협력적인 상호작용은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도 부합하며, 협력의 원칙 하에 운영되는 의회는 효과적인 입법 및 국정운영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에 있어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이에 유권자들 또한 이러한 여야 간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보다 바람직하게 인식할 것이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운영 원리는 여야 간의 초당파적(bipartisan)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여야 간의 협력은 의회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만이 아니라, 행정부-의회(실질적으로 행정부+여당 대 야당) 관계에서도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최근 의회 내에 여당과 야당 간의 당파적 대립과 양극화(polarization)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여야 간 갈등은 대표적으로 의원들의 기명투표(roll-call voting) 행태에서 발견되고 있으며(McCarty et al. 2006), 원내에서의 의원들의 발언이나 행태에서 무례한(uncivil; Uslaner 2000)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도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의회 내 여야 간 갈등은 입법 교착과 정책 공백을 초래하고(Binder 2003), 갈등을 다루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높이게 되며(Harbridge et al. 2014), 대통령의 정책 이니셔티브(initiative)에 대한 지지를 낮추게 된다(Fleisher and Bond 2000).

상술한 바는 의회 내 여야 간 대립의 징후 혹은 그것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정치적 결과들이다. 한편, 본 연구는 정당 및 정치인들의 차원에서 여야 간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정치적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넘어서서, 이러한 여야 간의 상호작용 양상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과 태도에 주목한다. 이러한 당파적 갈등에 대해 시민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역으로 말하면 시민들이 정치권에서의 초당파적(bipartisan)인 정치적 의사결정을 선호한다는 것이 알려져 왔다. 먼저, 피오리나와 아브람스(Fiorina and Abrams 2009)는 유권자들이 의회를 독단적이고(dogmatic), 분열적이며(divisive), 무례하다고(uncivil) 생각한다는 것을 보였다. 쿠퍼(Cooper 1999)는 대중들이 정부와 의회 내에서 나타나는 당파적이고 갈등적인 행태로 인해 이들을 비판적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의회 내에서 정당들이 당파성을 강조하면서 품위 없는 행태를 보이게 되면 대중들은 정책결정과정에 무관심해진다는 것이 지적되기도 하였다(Hibbing and Theiss-Morse 1995). 이에 정당 간의 갈등 혹은 협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어떠한 정치적 태도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2. 다수결제도 하에서의 여야 간 갈등: 다수당의 독주와 소수당의 배제

다수의 연구들은 갈등적 입법과정에 대한 유권자들이 부정적인 인식이 가져오는 결과물로서 의회에 대한 신뢰(trust in congress) 혹은 지지(institutional approval)가 낮아지고 있음에 주목해 왔다(Ramirez 2009; Jones 2015; Durr et al. 1997; Harbridge and Malhotra 2011 등). 유권자들은 정당 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갈등적/협력적 양상을 바탕으로 정책의 입안 과정을 평가하기 때문이다(Ramirez 2009). 맥카티 외(McCarty et al. 2009)와 테리올트(Theriault 2008)는 의회 내 여당과 야당 간의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을 때 의회에 대한 지지도(congressional approval)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존스(Jones 2015)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양극화의 심화가 미국 의회에 대한 대중 신뢰의 급격한 하락을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회 내 정당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패턴과, 의회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가 하락하는 패턴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비록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시기에는 상대 정당 지지자에 비해 약간 높은 의회 신뢰를 보여주기는 하였으나, 민주당 지지자들과 공화당 지지자들 모두 양극화 수준에 따른 신뢰의 하락의 경향성을 동일하게 나타냈기 때문에, 이러한 의회 신뢰의 급격한 하락은 특정한 한 정파에서 기인한 것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 있는 한국의 경우 또한 예외가 아니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국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낮은 신뢰를 보이고 있음이 보고되어 왔다(유성진 2009; 이현우 2006; 임성호 2006). 유권자들이 정당들의 초당파적 타협을 통한 정책 결정을 기대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은 다수당의 독단적 정책 결정과 소수당의 강경한 저지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그러한 국회 불신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유성진 2009; 서현진 2016). 이러한 정당 간의 파행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편으로, 2012년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여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는 동시에, 비제도적인 수단을 활용한 소수당의 저지를 막는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정당 간의 의사결정과정에 협치의 관행을 제도화하기도 하였다(정진민 2013).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존스(Jones 2015)의 연구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양극화의 수준과 국회 불신이 일치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지적한 동시에, 두 정당에 대한 지지자 집단을 비교해 본 결과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다

수 의석을 차지했던 시기에 이러한 다수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상대 정당 지지자보다 높은 의회 신뢰를 나타내는 패턴 또한 언급하였다. 이는 결국 유권자들은 지지하는 정당에 관계없이 정당 간의 갈등과 양극화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동시에 지지하는 정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의회에서는 정당 간 갈등이 첨예할지라도 다수당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가 산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수당 지지자들은 의회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소수당 지지자들은 의회 내에 양극화가 심각할 때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의사가 원내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을 것을 더욱 비판적으로 인식하기에 의회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히 집권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치적 환경에서는, 정부와 집권당이 국정을 주도하면서 소수 야당이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야당 지지자들에게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최근 한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이러한 양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020년 4월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크게 승리하였고, 따라서 180석을 차지하는 거대 여당이 탄생하였다. 본래 상임위원장은 13대 국회 이후 여당과 야당이 타협을 통해 배분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었는데(동아일보 2020a), 21대 국회의 원 구성에서 여야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였고, 32년 만에 여야 배분 관례가 깨진 사태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동아일보 2020b; 한겨레 2020a). 이러한 여당의 독주, 문재인 정부의 독주에 대해 유권자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2021년 4월 재보궐선거와 2022년 3월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기도 하였다(한국일보 2021a; 한국경제 2022). 한편,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50.7%의 응답자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을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특히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전신) 지지자 중 74.3%가 이를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52.6%는 오히려 이를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다(동아일보 2020c; 오마이뉴스 2020). 요컨대, 응답자들의 정당 지지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다수결제도 하에서 여야 간의 갈등은 결국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소수 야당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귀결되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 지지자들은 이를 크게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반면, 특히 야당 지지자들이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정부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당파적 태도와 여야 간 협력에 대한 인식

상술한 바를 종합하면,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과 양극화에 대해서는 특히 집권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에 제1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더욱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정치적 입장이 의회의 의사결정 및 정부의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을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는 본질적으로 당파적이고 이념적인 속성을 가진다. 정부의 정책은 선거에서의 승리를 통해 집권한 정당이 견지하는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당을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찬성하지 않을 경향성이 높은 반면, 집권 여당을 선택한 유권자들은 정부의 정책을 보다 선호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렇듯, 여야 간에 서로 상이한 정치적 선호를 가지는 상황에서 여야 간의 갈등 및 집권당과 정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야당이 배제된다면,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에 근거해 야당 지지자들은 정부의 정책을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여야 간의 협력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은 특히 야당 지지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이들로 하여금 정부의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순응을 하게 할 것이다. 이를 상세히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선거 정치가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인 성질로 인해,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policy evaluation) 및 정책 순응(policy compliance) 혹은 정부 신뢰(trust in government), 나아가 민주적 지지(democratic support)에까지 유권자들의 당파적 차이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앤더슨과 로템피오(Anderson and LoTempio 2002), 그리고 앤더슨 외(Anderson et al. 2005)는 이를 승자와 패자 사이의 차이(winner-loser gap)라고 명명한 바 있다. 이를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사례인 코로나 방역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 초기에는 국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전반적으로 형성되었으나, 코로나 상황이 변화해가면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갈라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평가의 차이는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에 따라 발현되었다(연합뉴스 2020; 중앙일보 2020; 프레시안 2020; 한겨레 2020b). 한편, 백신의 안전성이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특히 이는 여당과 야당 사이, 그리고 이들의 지지자들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적 이슈로 비화되고 있다(MBC 2021). 또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도 내수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

견과 재정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가르는 주요한 기준은 당파적 차이라는 것이 지적되었다(한국일보 2021b). 이렇듯, 코로나와 관련된 정부 정책의 시행에는 야당에 속한 정치인들 및 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끊임없는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이렇듯, 유권자들 사이에는 정부의 정책을 두고 정당 지지에 따른 상이한 선호 및 평가가 나타난다. 특히, 집권당과의 정치적 경쟁을 형성하고 있는 제1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정부와 집권당이 추진하는 정책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성을 띤다. 이렇게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유권자들의 당파적 차이가 존재하는 가운데, 여야 간의 갈등 및 정부와 여당의 독주는 야당 지지자들이 가지는 선호를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며 이들의 정책 순응을 더욱 낮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여야 간의 초당파적 타협과 소통은 특히 정치적 선호를 달리하는 야당 지지자들에게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순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한편,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기조와 여당 지지자들의 정치적 선호는 조응하며, 여야 간의 대립이 있을지라도 여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당 지지자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일관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이다. 정리하면, 여야 간의 초당파적 상호작용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은 특히 야당 지지자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높임으로써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선호에서 나타나는 당파적 차이를 상쇄시킬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당과 야당 간의 타협적인 상호작용의 양상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순응에서 나타나는 당파적 차이를 감소시킬 것임을 보이고자,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을 사례로 하여 경험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 하에서, 성공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방역 정책에 대해 당파성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지지와 순응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성격상 시급성을 띠고 있으며, 많은 이들의 순응을 이끌어 내야 하는 동시에 이탈하는 시민들 최소화해야 하는 집합행동(collective action)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정 2021). 코로나 팬데믹의 시기에, 현 정부는 방역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여당 지지자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일관되게 높은 지지를 표명하는 반면,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낮은 지지를 보인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여당이 야당과의 상호작용에서 타협적이거나 갈등적인 모습을 보이는 여부와는 큰 관계없이 정부의 방역 정책

시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높은 지지를 표명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러한 정부 정책이 국민의힘에서 내세우는 정치적 입장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와 여당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해 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나, 여야 간의 협력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여야 간의 갈등/협력은 대의민주주의의 질적 제고와 사회 통합, 그리고 성공적인 정책의 시행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 요인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유권자들이 코로나 방역 정책의 입안 및 시행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의 독주가 아닌, 여야 간의 협력이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특히 야당 지지자들에게서도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순응이 가능할 것임을 보임으로써,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정치적 논의에 바탕을 둔 정책 시행의 중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4. 연구 가설

이에 본 연구는 여야 간의 협력적 상호작용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가져오는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제시한다.

[가설1] 응답자가 여야 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위의 [가설1]은 여야 간의 협력과 소통에 기반한 상호작용을 보다 선호하는 유권자들의 태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행정부+집권당 대 야당이라는 정치적 환경 하에서 초당파적 협력의 행태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의회 내의 정책 결정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시행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측한다.

[가설2] 응답자가 여야 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에서 나타나는 당파적 차이가 감소할 것이다.

[가설2-1]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경우, 여야 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을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가설2-2]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경우, 여야 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을 “보다 현저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가설2]는 두 가지 차원으로 작동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평가와 높은 지지를 보일 것인 동시에, 다수결제도 하에서 여야 간의 협력적/갈등적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이다([가설 2-1]). 이와는 달리,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한 선호가 낮지만, 여야 간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해 국민의힘의 의사가 반영될 것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협력적/갈등적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다([가설 2-2]). 결국, 여야 간의 타협과 소통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 평가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당파적 차이를 감소시킬 것이다([가설 2]). 즉, 여야 간의 타협과 협의를 바탕으로 한 방역 정책의 시행은 특히 정부와 당파적·이념적 성향을 달리하는 제1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에게서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당파적 차이를 넘어서서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순응으로 이어질 것임을 함의한다.

이하에서 실시할 경험적 분석의 결과가 위의 가설들을 지지한다면, 시민들이 여야 간의 협력을 보다 선호하는 시민들의 태도를 확인하고, 타협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원활한 정책 시행을 제고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원인임을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Ⅲ. 데이터와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고려대학교 〈SSK 정부의 질과 거버넌스의 다양성〉 연구단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2021년 8월 19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온라인으로 실시한 유권자 2차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모집단은 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남녀이며,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3.0%p이다. 1차 조사에 참여한 1,507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1,155명이며, 조사를 완료한 인원은 1,103명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총 네 가지로,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과 관련된 네 가지

항목을 선정하여 응답자들의 평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첫째,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대한 평가*이다. 코로나와 관련된 정책 중 설문을 통해 조사된 총 일곱 가지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를 평균으로 계산하여 조작화하였다. 정책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부터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보다 큰 점수를 부여하였다.[1] 둘째,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태에 대한 평가*(sociotropic economic evaluation)이다.[2] 지난 6개월간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질문한 문항을 활용하여, 매우 나빠졌다는 1점부터 매우 좋아졌다는 5점에 이르는 점수를 부여하였다. 셋째, 코로나에 대한 방역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로서 *정부의 코로나 대응 평가*이다. 매우 못하고 있다는 1점에서부터 매우 잘하고 있다는 5점까지의 척도로 구성되는 변수로 조작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종속변수로 설정한다. 그 이유는, 정부 신뢰는 정책의 시행을 비롯한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의 총체이기 때문이다(Hetherington 1998; Miller 1974; Nye et al. 1997; Pharr and Putnam 2000).[3] 매우 불신=1, 약간 불신=2, 약간 신뢰=3, 매우 신뢰=4로 점수를 부여하여, 신뢰가 높아질수록 보다 높은 값을 가지는 변수로 코딩하였다. 이렇듯,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경험적 근거를 다양하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독립변수는 유권자의 *국회 내 여당과 야당 간의 소통* 정도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다. 이 변수는 여야 간의 협력적/갈등적 상호작용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여당과 야당 간에 얼마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여 조작화 하였다. 이 문항에서 소통이 매우 혹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소통이 매우 되지 않고 있다=1, 소통이 다소 되지 않고 있다=2, 보통+소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소통

1) 설문조사에 포함된 총 일곱 가지 정부 정책은 다음과 같다: 입국절차 강화 등 해외유입 차단, 확진자 발견과 접촉자 격리 등 차단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완화 조치, 마스크 공급,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백신 수급, 접종 진행 및 관리.

2) 먼저, 유권자들의 경제에 대한 평가는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회고적 평가, 그리고 향후의 상황에 대한 전망적 평가로 대별될 수 있다. 또한,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 등 자신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평가(pocketbook evaluation)와 국가 경제에 대한 평가(sociotropic evaluation)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중, 다수의 연구들은 '국가 경제에 대한 회고적 평가'가 투표 행태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Kinder and Kiewiet 1981; Markus 1988; Kramer 1971; Fiorina 1981). 이렇게 국가 경제에 대한 회고적 평가는 정치적 행태를 추동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이므로,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 영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3) 조영호(2019)의 연구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메르스(MERS)를 사례로 유권자들의 정부 신뢰를 분석 대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3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조작화 하였다.[4] 다음으로, 응답자의 정당일체감은 응답자가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질문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당일체감*, *국민의힘 정당일체감*, *기타 정당에 대한 일체감*, 그리고 특정한 정당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의 배타적인 범주로 구성된 변수를 네 개의 가변수로 조작화 하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당일체감은 추정을 위한 기준 범주로 분석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협력에 대한 인식이 응답자의 정당일체감에 따라 종속변수에 대해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력을 추정하기 위해서 *여야소통×더불어민주당*, *여야소통×국민의힘*, *여야소통×기타 정당*, 그리고 *여야소통×무당파* 네 개의 상호작용항을 조작화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기준 범주이므로 여야소통×더불어민주당 변수 또한 분석 모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제변수로는 응답자의 이념 성향,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구소득, 직업, 거주지역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조작화 하였다. 각 변수들의 조작화 방식은 〈표 1〉에, 그리고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표 1〉 변수의 조작화

변수	변수의 조작화
■ 종속변수	
정부의 코로나 정책 평가	코로나와 관련한 정부의 7가지 정책에 대한 평가의 평균 매우 부정적=1, 보통=3, 매우 긍정적=5
코로나로 인한 국가경제상황	매우 나빠졌다=1, 약간 나빠졌다=2, 동일하다=3, 약간 좋아졌다=4, 매우 좋아졌다=5의 순서형 범주 변수
정부의 코로나 대응	매우 못하고 있다=1, 대체로 못하고 있다=2, 보통=3, 대체로 잘하고 있다=4, 매우 잘하고 있다=5의 순서형 범주 변수
정부 신뢰	매우 불신=1, 약간 불신=2, 약간 신뢰=3, 매우 신뢰=4의 순서형 범주 변수
■ 독립변수	
국회 내 여당과 야당 간 소통 수준 인식	소통이 매우 되지 않고 있다=1, 소통이 다소 되지 않고 있다=2,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3
정당일체감	더불어민주당 정당일체감, 국민의힘 정당일체감, 기타 정당일체감, 무당파 4개의 가변수 (기준범주: 더불어민주당)
상호작용항	여야 간 소통×국민의힘, 여야 간 소통×기타정당, 여야 간 소통×무당파 (기준범주: 여야 간 소통×더불어민주당)

4) 국회 내에서 여당과 야당 간에 소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43명(3.98%), 소통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6명(0.54%)에 그친다.

변수	변수의 조작화
■ 통제변수	
이념성향	가장 진보=0, 중도=5, 가장 보수=10
연령	최소 20세, 최대 86세
성별	남성=1, 여성=0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1부터 대학원 재학/졸업=6까지의 순서형 범주 변수
가구소득	최소 100만원 미만=1부터 최대 1000만원 이상=11까지의 순서형 범주
직업	농/임/어업, 판매, 생산/기능/노무, 사무/관리/전문, 주부, 학생, 기타, 무직/구직 중 8개의 가변수 (기준범주: 무직/구직 중)
거주지역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7개의 가변수 (기준범주: 서울)

〈표 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변수	관찰갯수	평균 (혹은 비율)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정부의 코로나 정책 평가	1,103	3.068	0.938	1	5
	코로나로 인한 국가경제상황	1,103	(100,00)	-	-	-
	매우 나빠졌다	431	(39.08)	-	-	-
	약간 나빠졌다	465	(42.16)	-	-	-
	동일하다	158	(14.32)	-	-	-
	약간 좋아졌다	46	(4.17)	-	-	-
	매우 좋아졌다	3	(0.27)	-	-	-
	정부의 코로나 대응	1,103	(100,00)	-	-	-
종속	매우 못하고 있다	183	(16.59)	-	-	-
변수	대체로 못하고 있다	239	(21.67)	-	-	-
	보통	333	(30.19)	-	-	-
	대체로 잘하고 있다	294	(26.65)	-	-	-
	매우 잘하고 있다	54	(4.90)	-	-	-
	정부 신뢰	1,103	(100,00)	-	-	-
	매우 불신	220	(19.95)	-	-	-
	약간 불신	419	(37.99)	-	-	-
	약간 신뢰	419	(37.99)	-	-	-
	매우 신뢰	45	(4.08)	-	-	-

변수		관찰갯수	평균 (혹은 비율)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독립변수	**국회 내 여당과 야당 간의 소통**	1,103	(100,00)	-	-	-
	소통이 매우 되지 않고 있다	398	(36.08)	-	-	-
	소통이 다소 되지 않고 있다	409	(37.08)	-	-	-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296	(26.84)	-	-	-
	정당일체감	1,103	(100,00)	-	-	-
	더불어민주당	308	(27.92)	-	-	-
	국민의힘	221	(20.04)	-	-	-
	기타 정당	85	(7.71)	-	-	-
	무당파	489	(44.33)	-	-	-

본 연구의 종속변수 중 정부의 코로나 정책 평가는 연속형(continuous)으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국가경제상황,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부 신뢰는 순서를 가진 범주(ordinal categories)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OLS 선형회귀분석과 순서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 model)을 적용한다. OLS 회귀분석은 연속형 종속변수의 기댓값을 추정하며, 순서 프로빗 모형은 연속적인 잠재변수(continuous latent variable)인 y^*를 가정하고, 실제로 나타나는 종속변수 y의 각 범주에 속하는 y^*의 범위를 구함으로써 독립변수의 값에 따라 y의 각 범주를 선택할 확률을 추정하는 방법이며, 오차항의 분포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를 것을 가정한다(Long 1997; Menard 2001). 한 개의 OLS 회귀분석에서는 상수항의 계수값이 추정되며, 세 개의 순서 프로빗 모형에서는 종속변수 내에서 상위 범주로 바뀌게 되는 y^*의 임계값(thresholds)을 의미하는 θ가 추정된다.[5)]

본 연구는 응답자의 정당 선호에 따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을 구성하고, 연속형 종속변수인 경우 OLS 회귀분석을, 순서를 가진 범주형 종속변수인 경우 프로빗 모형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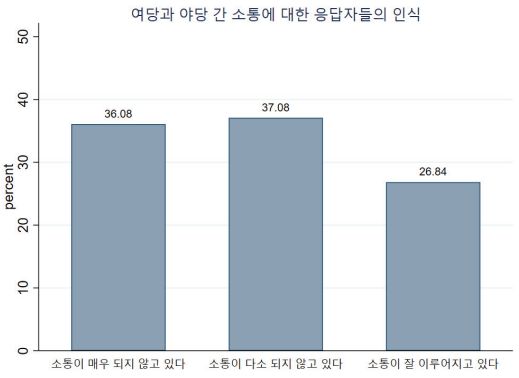
5) 따라서 범주가 다섯 개인 국가경제 평가, 그리고 정부의 코로나 대응 평가 변수는 4개의 θ가, 범주가 네 개로 구성되는 정부 신뢰 변수는 3개의 θ가 추정된다.

Ⅳ. 분석 결과

1. 여야 간 소통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코로나 대응 평가

하단의 〈그림 1〉은 응답자들이 국회 내 여당과 야당 간의 초당파적 상호작용, 즉 이들 사이에 얼마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응답자들이 여야 간에 소통이 매우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6.08%, 소통이 다소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7.08%로, 국회 내 여야 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70%가 넘었다. 여야 간 소통 수준이 보통이거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26.84%로, 많은 수의 응답자들은 조사 시점에서 여당과 야당 간에 초당파적인 협력과 소통의 수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국회 내 여당과 야당 간 소통 수준



본 연구는 유권자들의 이러한 인식이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한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이에 이하에서는 OLS 회귀분석과 순서프로빗 분석을 실시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과 다른 응답자들, 특히 주요한 정치적 경쟁을 형성하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자들과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기준범주를 더불어민주당 정당일체감으로 설정함으로써 수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당일체감 변수가 제외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분석 결과: 기본 모형

	OLS 회귀분석	순서 프로빗 회귀분석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 평가	코로나로 인한 국가경제상태 평가	정부의 코로나 대응 평가	정부 신뢰
여당과 야당 간 소통 인식	0.258***	0.421***	0.454***	0.464***
	(0.031)	(0.046)	(0.045)	(0.047)
국민의힘	-0.852***	-0.318**	-1.249***	-1.178***
	(0.083)	(0.122)	(0.121)	(0.126)
기타 정당	-0.423***	-0.009	-0.686***	-0.782***
	(0.096)	(0.138)	(0.135)	(0.141)
무당파	-0.615***	-0.182*	-0.817***	-0.824***
	(0.061)	(0.088)	(0.089)	(0.093)
이념성향	-0.085***	0.004	-0.117***	-0.089***
	(0.014)	(0.021)	(0.020)	(0.021)
연령	0.014***	0.003	0.012***	0.012***
	(0.002)	(0.003)	(0.003)	(0.003)
성별(남성=1)	-0.086	0.272**	-0.022	-0.038
	(0.056)	(0.081)	(0.078)	(0.082)
교육수준	-0.009	0.035	-0.012	-0.019
	(0.025)	(0.036)	(0.035)	(0.036)
가구소득	0.016	-0.025	0.014	0.031†
	(0.011)	(0.016)	(0.015)	(0.016)
농/임/어업	0.262	0.246	0.464	0.373
	(0.227)	(0.320)	(0.320)	(0.333)
판매	-0.132	-0.154	-0.256	-0.071
	(0.111)	(0.162)	(0.156)	(0.163)
생산/기능/노무	-0.043	0.017	0.063	0.193
	(0.095)	(0.137)	(0.134)	(0.140)
사무/관리/전문	-0.025	-0.015	0.043	0.081
	(0.088)	(0.128)	(0.124)	(0.129)
주부	-0.156	-0.155	-0.044	-0.094
	(0.097)	(0.141)	(0.135)	(0.141)
학생	0.269†	0.075	0.377†	0.344†
	(0.138)	(0.199)	(0.193)	(0.200)
기타	-0.056	-0.180	0.117	0.084
	(0.108)	(0.159)	(0.151)	(0.158)

	OLS 회귀분석	순서 프로빗 회귀분석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 평가	코로나로 인한 국가경제상태 평가	정부의 코로나 대응 평가	정부 신뢰
인천/경기	-0.130†	0.049	-0.230*	0.065
	(0.068)	(0.100)	(0.096)	(0.101)
대전/세종/충청	-0.178†	-0.043	0.000	0.143
	(0.092)	(0.136)	(0.129)	(0.135)
광주/전라	0.016	0.230†	0.035	0.117
	(0.094)	(0.135)	(0.132)	(0.138)
대구/경북	-0.216*	0.084	-0.198	0.176
	(0.094)	(0.138)	(0.132)	(0.138)
부산/울산/경남	-0.099	0.092	-0.197†	0.112
	(0.079)	(0.116)	(0.112)	(0.117)
강원/제주	-0.105	0.106	-0.017	0.237
	(0.127)	(0.185)	(0.178)	(0.186)
상수	2.898***	-	-	-
	(0.193)			
threshold 1	-	0.666	-1.094	-0.433
		(0.284)	(0.275)	(0.286)
threshold 2	-	1.936	-0.213	0.872
		(0.287)	(0.274)	(0.287)
threshold 3	-	2.802	0.812	2.815
		(0.293)	(0.274)	(0.297)
threshold 4	-	3.904	2.295	-
		(0.341)	(0.281)	
N	1,103	1,103	1,103	1,103
R^2	0.3477	-	-	-
Pseudo R^2	-	0.0587	0.1513	0.1546

*** p<0.001, ** p<0.01, * p<0.05, † p<0.1

기준 범주: 더불어민주당 정당일체감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과 관련된 네 가지의 종속변수를 두고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가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국회 내 여야 간 소통 변수는 네 번의 분석 모두에서 종속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에 대한 평가를 종속변수로 한 OLS 회귀분석 결과에서, 응답

자들이 인식하는 국회 내 여야 간 소통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하면 이들의 정책 평가의 기댓값이 0.258 만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국가경제상태에 대한 평가,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또한 정책의 시행 주체인 정부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도, 순서 프로빗 회귀분석 결과 응답자들의 여야 간 소통의 수준 인식이 높아질수록 각 종속변수 내에서 상위의 범주를 선택하게 되는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회귀계수는 각각 0.421, 0.454, 0.464로 추정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유의수준 $p<0.001$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이 네 개의 분석들은 본 연구의 [가설1]을 명확하게 뒷받침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요컨대,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유권자들이 여당과 야당의 초당파적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정책의 시행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나아가, 정부의 정책 시행과 관련된 긍정적인 평가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와 순응을 높임으로써, 특히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가 수반되어야 하는 방역과 같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에 대한 평가, 국가경제상태에 대한 평가, 정부의 코로나 대응 평가, 그리고 정부 신뢰에서 응답자들의 정당 선호에 따른 차이가 나타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당일체감 변수의 기준범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제외하였는데, 따라서 각 정당일체감 변수의 회귀계수는 종속변수의 기댓값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과 각 범주에 속하는 응답자들의 상대적 차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주요한 정치적 대립을 형성하고 있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 비해 낮은 정책 평가를 보여야 하고, 이러한 기대와 일치하게 국민의힘 정당일체감 변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력을 나타냈다. 회귀계수는 각각 $-0.852(p<0.001)$, $-0.318(p<0.01)$, $-1.249(p<0.001)$, $-1.178(p<0.001)$이며, 이들은 모두 각 분석에서 정당일체감 범주 내에서 가장 큰 절댓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 비해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정부의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가장 낮게 평가한다는 예측과 일치한다.

이에 하단에서는 여야 간의 협력적 태도에 대한 인식이 정부의 정책 평가에서 나타나는 당파적 차이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해, 정당 선호에 따라 나타내는 정책 평가에서의 차이에 대해 여야 간의 소통에 대한 인식 수준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2. 정부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당파적 선호와 여야 간 소통에 대한 인식: 코로나 대응 정책 평가, 국가경제 평가

이 절에서는 코로나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 시행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를 살펴볼 수 있는 두 개의 종속변수, 즉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 평가와 국가경제상태 평가를 대상으로 하여, 여당과 야당 사이의 소통에 대한 인식이 두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다. 특히, 본 연구가 예측하는 것은 여야 간의 초당파적 협력과 소통이 특히 정치적 성향을 가장 달리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서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주목하기 위해, 기준범주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일체감, 그리고 여야소통×더불어민주당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하단의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분석 결과: 코로나 대응 정책 평가, 국가경제 평가에 대한 상호작용 모형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 평가 (OLS 회귀분석)		코로나로 인한 국가경제상태 평가 (순서 프로빗 회귀분석)	
	coef.	S.E.	coef.	S.E.
여당과 야당 간 소통 인식	0.008	0.060	0.256**	0.087
국민의힘	-1.770***	0.199	-1.375***	0.303
기타 정당	-1.294***	0.259	0.003	0.379
무당파	-1.238***	0.167	-0.568*	0.248
여야소통×국민의힘	0.470***	0.097	0.568***	0.144
여야소통×기타 정당	0.412**	0.120	-0.032	0.174
여야소통×무당파	0.282***	0.074	0.168	0.108
이념성향	-0.076***	0.014	0.014	0.021
연령	0.014***	0.002	0.003	0.003
성별(남성=1)	-0.084	0.055	0.276**	0.082
교육수준	-0.014	0.025	0.030	0.036
가구소득	0.015	0.011	-0.026	0.016
농/임/어업	0.261	0.225	0.256	0.321
판매	-0.114	0.110	-0.139	0.162
생산/기능/노무	-0.071	0.094	0.005	0.138
사무/관리/전문	-0.015	0.087	-0.004	0.129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 평가 (OLS 회귀분석)		코로나로 인한 국가경제상태 평가 (순서 프로빗 회귀분석)	
	coef.	S.E.	coef.	S.E.
주부	-0.162†	0.096	-0.163	0.142
학생	0.286*	0.136	0.089	0.199
기타	-0.069	0.107	-0.192	0.159
인천/경기	-0.130†	0.068	0.047	0.100
대전/세종/충청	-0.172†	0.091	-0.036	0.136
광주/전라	0.030	0.093	0.245†	0.135
대구/경북	-0.207*	0.093	0.082	0.139
부산/울산/경남	-0.088	0.079	0.103	0.117
강원/제주	-0.115	0.126	0.088	0.185
상수	3.416***	0.220	-	-
threshold 1	-	-	0.327	0.325
threshold 2	-	-	1.608	0.327
threshold 3	-	-	2.482	0.332
threshold 4	-	-	3.608	0.377
N	1,103		1,103	
R^2	0.3645		-	
Pseudo R^2	-		0.0657	

*** p<0.001, ** p<0.01, * p<0.05, † p<0.1
기준 범주: 더불어민주당 정당일체감

먼저,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에 대한 OLS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표 4〉의 왼쪽 패널을 보면, 여당과 야당 간 소통에 대한 인식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변수는 기준 범주로 제외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이 나타내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에게서는 여야소통에 대한 인식이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정책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은 여야소통의 수준에 관계없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일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개의 상호작용항은 모두 양(+)의 계수값을 나타냄으로써, 국민의힘 지지자와 기타 정당 지지자, 그리고 무당파 응답자들은 여야소통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각각 p<0.001, p<0.01, p<0.001). 이 중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계수값이 가장 큰 절댓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서도 여당과 야당 간

에 소통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 경우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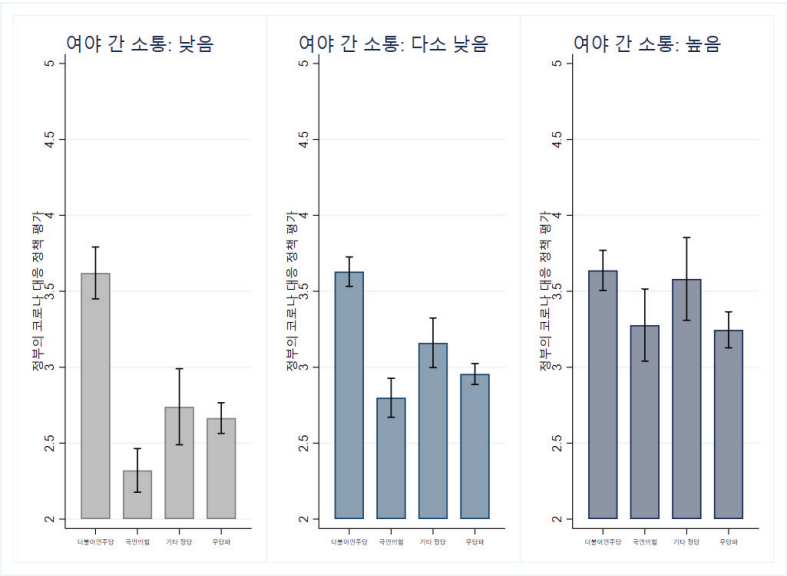
다음으로, 〈표 4〉의 오른쪽 패널은 코로나로 인한 국가경제의 상태에 대한 평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여당과 야당 소통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1$).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서도 여야소통에 대한 인식이 국가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데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으로, 특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에게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계수값이 추정되었는데(0.568, $p<0.001$), 이는 이들이 여야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코로나로 인한 국가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코로나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를 살펴볼 수 있는 두 종속변수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모두, 여야소통에 기반한 긍정적인 인식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서도 정부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이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의 정책 시행 과정에서 야당의 동의와 합의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의 태도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서 특히 현저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역으로 말하면 여야 간의 초당파적 소통과 타협이 이루어지는 경우 야당 지지자들에게서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순응과 지지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이러한 두 분석 결과들을 보다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한 평가의 예측치(prediction)와 국가경제상태 평가의 예측 확률(predicted probability)을 〈그림 2〉와 〈그림 3〉으로 나타냈다. 먼저 OLS 분석 결과의 예측치를 나타낸 〈그림 2〉를 살펴보면, 여당과 야당에 대한 소통 수준에 관계없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가장 높고 일관된 정책 지지를 보이고 있다. 그림 [2-1], [2-2], [2-3]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의 정책 평가가 가장 높으며, 그 정도에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보다 중요한 것으로, 본 연구가 주목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서는 여야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영향력이 가장 현저하게 높아졌다. 그림 [2-1], [2-2], [2-3]로 옮겨감에 따라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서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1]을 보면 여야 간 소통이 낮은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와 국민의힘 지지자 사이에 정책 평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나, 여야 간 소통이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2-3]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와 국민의힘 지지자 사이에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이 겹쳐 두 집단 사이에 정책 평가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림 2〉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 평가에 대한 예측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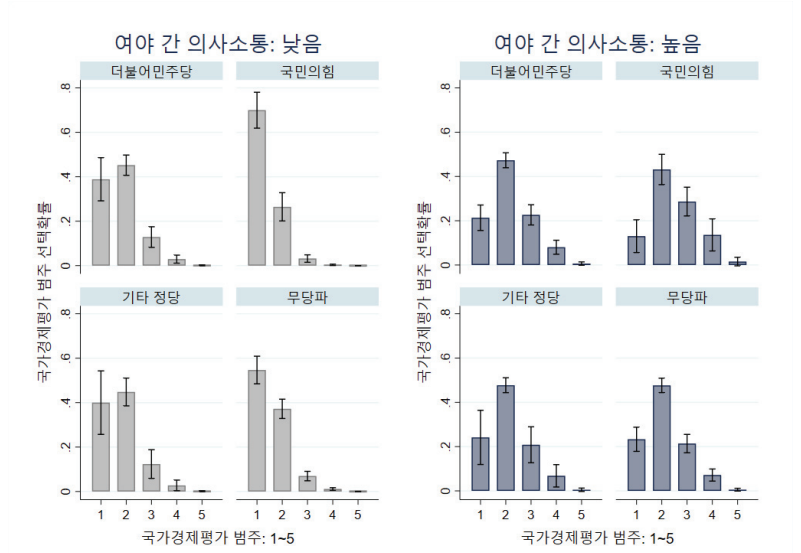
[2-1] [2-2] [2-3]



국가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분석 대상으로 한 순서 프로빗 회귀분석 결과 또한 마찬가지의 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3〉에서 여야 간 의사소통이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을 중심으로 도해한 [3-1]을 보면, 주로 1과 2의 범주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전반적으로 국가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보다 우세한 것을 알 수 있는 가운데,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서 그 평가가 가장 부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야 간 의사소통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3-2]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국가경제 상황에 대해 [3-1]과 유사한 수준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특기할 만한 결과는 [3-2]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만큼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림 3〉 코로나로 인한 국가경제상황 평가에 대한 예측 확률

[3-1] [3-2]



요컨대, 위의 두 분석 결과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본질적으로 유권자들 사이에 당파적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여야 간에 초당파적 타협과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야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에게서도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 지지와 순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3. 정부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당파적 선호와 여야 간 소통에 대한 인식: 정부의 코로나 대응 평가, 정부 신뢰

상단에서는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대한 평가를 살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안, 즉 코로나 정책 및 국가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방역 정책을 실행하는 주체로서의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에도 마찬가지의 패턴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정부가 코로나에 대해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여 형성되는 태도인 정부 신뢰를 대상으로 하여 여당과 야당의 초당파적 협력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다. 본 연구가 예상하는 것은 여야 간의 소통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서는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인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에게서는 가장 현저하게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일률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것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여야 소통의 수준에 따라서 정부에 대한 평가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대한다. 따라서 두 주요 정당을 지지하는 응답자 집단 사이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려는 목적으로, 하단의 두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준 범주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일체감, 그리고 여야소통×더불어민주당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하단의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분석 결과: 정부의 코로나 대응 평가, 정부 신뢰에 대한 상호작용 모형

	정부의 코로나 대응 평가 (순서 프로빗 회귀분석)		정부 신뢰 (순서 프로빗 회귀분석)	
	coef.	S.E.	coef.	S.E.
여당과 야당 간 소통	0.196*	0.086	0.253**	0.090
국민의힘	-2.233***	0.291	-1.970***	0.302
기타 정당	-1.986***	0.373	-1.735***	0.386
무당파	-1.409***	0.240	-1.317***	0.250
여야소통×국민의힘	0.497***	0.139	0.401**	0.145
여야소통×기타 정당	0.629***	0.172	0.460*	0.178
여야소통×무당파	0.261**	0.105	0.220*	0.110
이념성향	-0.109***	0.021	-0.081***	0.021
연령	0.013***	0.003	0.013***	0.003
성별(남성=1)	-0.026	0.079	-0.039	0.082
교육수준	-0.018	0.035	-0.023	0.037
가구소득	0.013	0.015	0.030†	0.016
농/임/어업	0.479	0.321	0.382	0.334
판매	-0.233	0.157	-0.051	0.163
생산/기능/노무	0.033	0.134	0.170	0.140
사무/관리/전문	0.063	0.124	0.093	0.130
주부	-0.049	0.135	-0.097	0.142
학생	0.407*	0.193	0.366†	0.201
기타	0.112	0.152	0.080	0.159
인천/경기	-0.226*	0.096	0.069	0.101
대전/세종/충청	0.004	0.129	0.150	0.135

	정부의 코로나 대응 평가 (순서 프로빗 회귀분석)		정부 신뢰 (순서 프로빗 회귀분석)	
	coef.	S.E.	coef.	S.E.
광주/전라	0.048	0.132	0.128	0.139
대구/경북	-0.179	0.133	0.189	0.138
부산/울산/경남	-0.184	0.112	0.124	0.117
강원/제주	-0.023	0.178	0.234	0.187
threshold 1	-1.650	0.318	-0.872	0.330
threshold 2	-0.753	0.316	0.445	0.328
threshold 3	0.279	0.314	2.382	0.338
threshold 4	1.762	0.321	-	-
N	1,103		1,103	
Pseudo R^2	0.1573		0.1588	

*** p<0.001, ** p<0.01, * p<0.05, † p<0.1
기준 범주: 더불어민주당 정당일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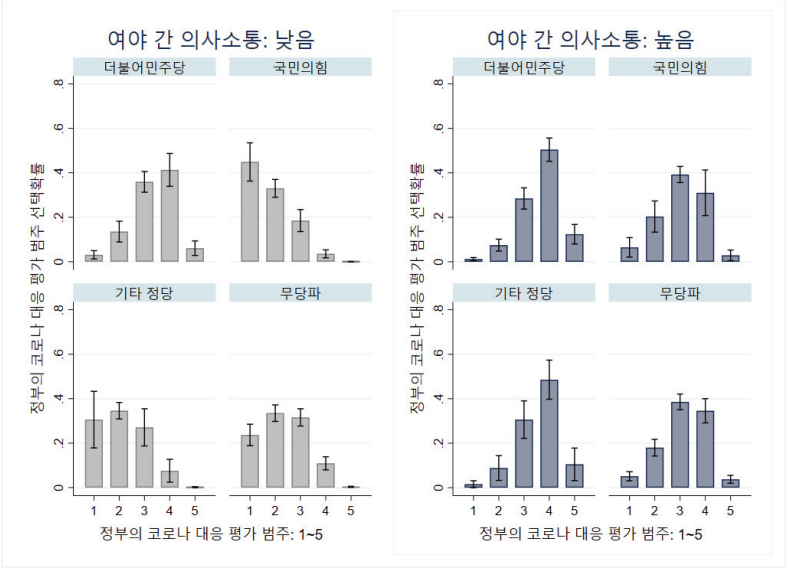
정부의 코로나 대응 평가와 정부 신뢰를 종속변수로 한 두 분석 결과는 서로 동일한 패턴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야소통에 대한 인식 변수는 두 분석 결과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 변수는 기준 범주로 제외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이 가지는 영향력으로, 우선적으로 이들에게서도 여야소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정부의 코로나 대응 평가와 정부 신뢰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세 개의 상호작용항은 두 모형에서 모두 양(+)의 계수값을 나타냈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정부의 코로나 대응 평가에서는 각각 p<0.001, p<0.001, p<0.01; 정부 신뢰에 대해서는 각각 p<0.01, p<0.05, p<0.05).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을 제외한 다른 세 집단에 속하는 응답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 비해 모두 여야소통 인식이 정부의 코로나 대응 평가 및 정부 신뢰를 높이는 영향력이 더 클 것임을 의미하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과 각 집단에서의 영향력의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주목하고 있는데, 기타 정당 지지자들보다 다소 작은 계수값이 추정되기는 하였으나, 중요한 것은 여야 간 소통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 정부 여당과 정치적으로 주요한 대립을 형성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에게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못지 않게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분석 결과들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하고자, 여야 간 소통 수준의 인식에 따른 정부의 코로나 대응 평가와 정부 신뢰의

예측 확률(predicted probability)을 〈그림 4〉와 〈그림 5〉로 나타냈다. 먼저 〈그림 4〉를 살펴보면, [4-1]과 [4-2]에서 좌측 상단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서는 여야 갈등의 수준이 상이하여도 다섯 개의 범주 간에 선택 확률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1과 2의 범주를 선택할 확률은 매우 낮은 반면,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4와 5의 범주를 선택할 확률은 [4-1]에서 약 50%, 그리고 [4-2]에서 약 60%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다른 응답자 집단에서는 [4-1]에 비해 [4-2]에서 코로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범주를 선택하는 확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4-1]과 [4-2]의 우측 상단에 위치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서도 현저하게 각 범주의 선택 확률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4-1]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래프의 패턴에 차이가 관찰되는 반면, [4-2]에서는 두 응답자 집단에서 유사한 패턴의 그래프가 확인되고 있다.

〈그림 4〉 정부의 코로나 대응 평가에 대한 예측 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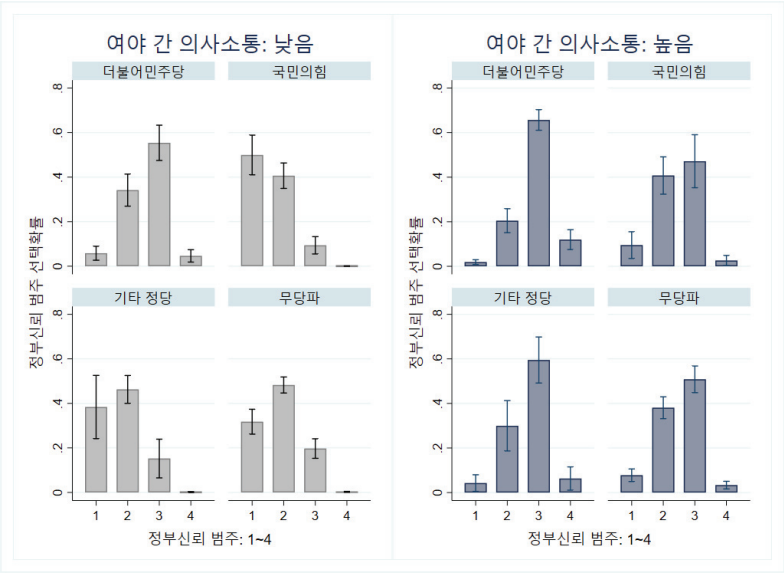
[4-1] [4-2]



마지막으로, 정부 신뢰를 대상으로 한 예측 확률을 나타낸 〈그림 5〉 또한 상술한 다른 분석결과와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5-1]과 [5-2]에서 좌측 상단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서는 여야소통 수준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계없이, 정부 신뢰의 네 개의 범주를 선택하는 상대적인 확률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정부를 불신한다는 1과 2의 범주를 선택할 확률은 낮은 반면, 정부에 대한 약간의 신뢰를 가진다는 3의 범주를 선택할 확률이 가장 높은 가운데, 이는 여야소통 수준에 관계없이 약 6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다른 응답자 집단에서는 여야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정부를 불신한다는 범주를 선택할 확률이 낮아지는 동시에, 정부를 약간 신뢰한다는 범주를 선택할 확률은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주목하여 살펴보면, 여야 간 소통이 낮은 [5-1]의 경우에는 이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정부 신뢰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여야소통이 높다고 인식하는 [5-2]에서는 두 응답자 집단에서 정부 신뢰의 각 범주를 선택할 상대적 확률이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정부 신뢰에 대한 예측 확률

[5-1] [5-2]



본 연구가 제시한 분석 결과들은 유권자들이 여당과 야당 간의 초당파적 협력과 소통을 선호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먼저, 응답자들은 여야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과 관련된 제반 영역에서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가설1]). 한편, 비록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 유권자들은 자신의 정당 선호에 따라 필연적으로 상이한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여야 간 소통을 기반으로 정책이 실행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특히 야당 지지자들에게서 긍정적인 평가를 높임으로써 그러한 당파적 차이가 상당 부분 상쇄되었다([가설2]). 궁극적으로, 특히 대규모의 지지와 순응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방역 정책과 같은 집합행동의 영역에서, 여야 간의 초당파적 상호작용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당파적 차이를 낮추고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여당과 야당 간의 협력과 소통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를 확인하고, 이것이 유권자들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의 결과 주요한 발견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당과 야당 간의 협력과 소통은 응답자들의 정부 정책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응답자가 여야 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한 이들의 평가가 높아졌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코로나 정책에 대한 평가,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의 국가적 경제 상태에 대한 평가,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그리고 코로나 방역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로서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종속변수로 하여 살펴본 결과, 정책의 시행이 여야 간의 초당파적 협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가 보다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유권자들이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중요시 하며, 이에 기반한 정책에 대해 보다 높은 지지와 순응을 보일 것임을 의미한다.

둘째, 이러한 여당과 야당의 협력에 기반한 상호작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특히 정부의 정책에 대한 당파적 차이를 완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자의 지지 정당에 따라 정부 정책의 평가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가운데, 응답자가 여야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인식할수록 그러한 차이는 상쇄되었다. 본질적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집권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을 보이

는 반면, 야당 지지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평균적으로 낮게 평가를 한다. 이는 야당 지지자들의 경우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정당이 정부를 구성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조응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특히 집권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환경에서 여야 간 대립과 갈등은 결국 야당 의사의 배제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듯, 현실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은 정치적 권한을 부여 받은 정부와 집권당이 주도하게 되는 환경이지만, 이 과정에서 여야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야당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도 정부 정책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나아가 정부 정책에 지지를 표할 수도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라는 감염병이 사회 전반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초점은 불가피하게 코로나 방역에 맞추어져 있다. 광범위한 참여를 필요로 하고 이탈자를 최소화해야 하는 방역 정책에 있어서는 특히 정부와 집권당에 대한 일부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지지와 순응을 이끌어 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된다. 따라서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사회 통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타협과 협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야 간의 협력과 소통이 가지는 바람직한 기능을 경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이를 제고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의 필요성과 동시에, 여야 간의 협력을 보다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학술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강원택. 2019. *한국정치론*. 서울: 박영사.

곽진영・김준석・박경미. 2009. "입법과정에서의 소수당 배려: 의사결정과정의 대표성 확보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 용역보고서.

김정. 2021.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성공 조건: 한국 사례의 비교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37(1): 191-221.

서현진. 2016. "국회 갈등과 신뢰도에 관한 연구." ≪분쟁해결연구≫, 14(2): 159-184.

박찬표. 2001. "의회-행정부 관계의 유형과 변화: 약한 정책적 통제와 강한 정치적 통제의 부조화." ≪의정연구≫, 7(2): 71-98.

유성진. 2009. "국회의 사회통합기능과 국민의 신뢰: 국회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괴리." ≪의정연구≫, 15(1): 119-144.

이현우. 2006. "17대 국회에 대한 국민평가: 구조적 문제와 운영적 문제." ≪의정연구≫, 12(1): 5-30.

임성호. 2006. "거버넌스 핵심요소로서의 정치신뢰감과 대의과정." ≪의정연구≫, 12(1): 195-222.

정진민. 2008. "생산적 국회운영을 위한 대통령-국회 관계와 정당." ≪한국정당학회보≫, 7(1): 77-102.

_____. 2013. "국회선진화법과 19대 국회의 과제: 국회 운영방식과 대통령-국회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6(1): 5-29.

조영호. 2019, "박근혜 정부 시절 메르스(MERS) 사태와 정부신뢰 하락," ≪한국정치연구≫, 28(2): 167-193.

Anderson, Christopher J., & LoTempio, Andrew J. 2002. "Winning, Losing and Political Trust in America."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 335-351.

_____, Blais, Andre, Bowler, Shaun, Donovan, Tood, & Listhaug, Ola. 2005. *Losers' Consents: Elections and Democratic Legitim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Andeweg, Rudy, & Mijzink, Lia. 1995. "Beyond the Two-body Image: Relations between Ministers and MPs." In Herbert Doring (ed). *Parliaments and Majority Rule in Western Europe* (pp. 152-178). Frankfurt: Campus.

Binder, Sarah A. 2003. *Stalemate*.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Cooper, Joseph. 1999. *Congress and the Decline of Public Trust*. Boulder, CO: Westview Press.

Durr, Robert H., Gilmour, John B., & Wolbrecht, Christina. 1997. "Explaining Congressional Approval."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41(1): 175-207.

Fiorina, Morris P. 1981.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_____, & Abrams, Samuel A. 2009. *Disconnect: The Breakdown of Representation in American Politics*.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Fleisher, Richard, & Bond, Jon R. 2000. "Congress and the President in a Partisan Era." In Jon R. Bond and Richard Fleisher (eds). *Polarized Politics: Congress and the President in a Partisan Era* (1-8). Washington, DC: CQ Press.

Harbridge, Laurel, & Malhotra, Neil. 2011. "Electoral Incentives and Partisan Conflict in Congress: Evidence from Survey Experiment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5(3): 1-17.

_____, & Harrison, Brian F. 2014. "Public Preferences for Bipartisanship in the Policymaking Proces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39(3): 327-355.

Hetherington, Marc J. 1998.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791-808.

Hibbing, John R., & Theiss-Morse, Elizabeth. 1995. *Congress as Public Enemy: Public Attitudes toward American Political Institu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2002. *Stealth Democracy: Americans' Beliefs about How Government Should Wor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Jones, David R. 2015. "Declining Trust in Congress: Effects of Polarization and Consequences for Democracy." *The Forum*, 13(3): 375-394.

Kimball, David C., & Patterson, Samuel C. 1997. "Living up to Expectations:

Public Attitudes toward Congress." *Journal of Politics*, 59(3): 701-728.

Kinder, Donald R., & Kiewiet, Roderick. 1981. "Sociotropic Politics: The American Cas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1(2): 129-161.

King, Anthony. 1976. "Modes of Executive-Legislative Relation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1(1): 11-36.

Kramer, Gerald H. 1971. "Short-Term Fluctuations in U.S. Voting Behavior, 1896-1964."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1): 131-143.

Lijphart, 1999.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Long, J. Scott. 1997. *Regression Models for Categorical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McCarty, Nolan, Poole, Keith, & Rosenthal, Howard. 2006. *Polarized America: The Dance of Ideology and Unequal Riches*. Cambridge: MIT Press.

Markus, Gregory B. 1982. "Political Attitudes during an Election Year: A Report on the 1980 NES Panel Stud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6(3): 538-560.

Menard, Scott W. 2001. *Appli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Miller, Arthur H. 1974. "Political Issues and Trust in Government: 1964-1970."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3): 951-972.

Nye, Joshep S., Zelikow, Philip D., & King, David C. 1997.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harr, Susan J., & Putnam, Robert D. 2000. *Disaffected Democracies: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Ramirez, Mark D. 2009. "The Dynamics of Partisan Conflict on Congressional Approv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3(3): 681-694.

Schattschneider, Elmer E. 1958. *Party Government*. New York: Rinehart.

Shaw, Malcolm. 2004. "The British Parliament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Parliamentary Affairs*, 57(4): 877-889.

Theriault, Sean M. 2008. *Party Polarization in Congres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Tyler, Tom R. 1994. "Governing amid Diversity: The Effect of Fair

Decisionmaking Procedures on the Legitimacy of Government." *Law & Society Review*, 28(4): 809-831.

Uslaner, Eric M. 2000. "Is the Senate More Civil than the House?" In Burdett A. Loomis (ed). *Esteemed Colleagues: Civility and Deliberation in the Senate* (pp. 32-56).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es.

≪동아일보≫. 2020a. "법규정 없는 상임위원장 배분, 13대 이후 여야 타협의 산물." 6월 13일.

_____. 2020b. "민주당 17개 상임위 독식... 32년 만에 여야 배분 원구성 관례 깨졌다." 6월 29일.

_____. 2020c. "與 상임위원장 17곳 싹쓸이에 대한 우리 국민들 반응은..." 7월 2일.

≪연합뉴스≫. 2020. "文대통령 지지율 3%p 오른 44%... 신종 코로나 대처 '긍정평가' [한국갤럽]." 2월 7일.

≪오마이뉴스≫. 2020. "문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 '상임위 독식' 영향?" 7월 2일.

≪중앙일보≫. 2020. "외신이 본 총선... NYT "바이러스의 승리" WP는 선거방역 찬사." 4월 16일.

≪프레시안≫. 2020. "'코로나 대응' 찬반론 속 文대통령 지지율 교착." 3월 6일.

≪한국경제≫. 2022. "文정부 독주 5년... 정권교체 열망이 '정치 신인'을 대통령 만들었다." 3월 10일.

≪한국일보≫. 2021a. "여당 '입법 독주' 재연, 오만에 대한 심판 잊었나." 8월 21일.

_____. 2021b. "국민 70%가 반대하는데... 민주당은 왜 '이재명표 재난지원금' 밀어붙일까." 11월 11일.

≪한겨레≫. 2020a. "슈퍼여당, 상임위 독식... 견제장치가 없다." 6월 29일.

_____. 2020b. "코로나19 정부 대응 평가에 정치성향별 편차 커." 10월 30일.

≪MBC≫. 2021. "백신 맞겠다 '극진보 83%' vs. '극보수 47%'... 정쟁화된 백신." 3월 21일.

Public Preferences for Bipartisan Compromise: How Bipartisanship Influences Public Evaluation of the Government's COVID-19 Prevention Policies

Jung-ah Gi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ocus on how the compromise between the two leading par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affects the public's perception of COVID-19 prevention policies. More specifically, I examined how the public evaluation of such policies becomes increasingly positive with the perception of bipartisan interaction.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citizens' positive perception of bipartisan compromise is likely to improve their perspective on various aspects related to COVID-19 prevention policies. The government's positions on particular policies naturally imply partisan orientations. Thus, the public inevitably evaluates a given policy or law based on their partisan preferences. Nevertheless, the positive perception of bipartisanship invalidates partisan differences regarding COVID-19 prevention polic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bipartisan compromise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a prerequisite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olicies requiring mass support and compliance.

※ Keywords: Bipartisanship, Policy evaluation, COVID-19